

민주 “野 필리버스터 7~10건 감수... 12월에 개혁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피력하면서 특별검사 추진 입장에 거듭 강조했다. 국회 예산 국면 이후인 내달 국민의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도 사법 개혁을 신속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추경호 전(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이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10번, 20번, 100번 더 외쳐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정치검사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그 기준에 따르면 국힘은 10번 100번이고 정당 해산돼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개정하고 할 수 있는 일 다해야”... 곧 발의 ‘대장동 국조’에 “다 묶어서 하자는 것까지 의견 좁혀”

서 전광석화처럼, 진짜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국회가 끝나고 또 여러분들께 힘써서 같이 가자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다.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향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 반란”이라며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시도에 맞선 결기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지금 다시 요구되고 있다”며 “힘과 지혜를 모아 검찰 개혁과 정치 검찰 단죄를 완수하자”고 보탰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직전 검찰 규탄 피켓 시위를 열고 ‘법치 부정 집단 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조작 수사 표적기소 정치검사 규탄한다’, ‘항소 자제 사실 왜곡 정치검사 규탄한다’, ‘정치검사 특권 철폐 집단 항명 단죄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해질 것 같은데 특검을 추진하겠다. 정치 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진행 방식과 명칭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에서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저는 명백한 국가 문란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로잡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보직 해임, 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장한다”고 했다.

또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웃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때돈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예산(국면)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외곽직, 재판소원 등 사법 개혁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

사 대상) 요청은 외압 수사와 기소, 선택적 집단 항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쪽은 항소 포기, 외압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변인은 “일단 이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하자는 것까지는 의견이 좁혀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방법에 대해서는 법사위나, 특위나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반대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의장님은 항상 여야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부득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왔던 (대로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기존에도 그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시점이 확정 안 돼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 징계를 받지만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5단계 징계를 받는다. 검사 파면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가능하다. /뉴시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계엄해제 표결 방해한 혐의... 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여러차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제가 진짜 표결을 방해

추 의원은 특검의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구조개혁 시동

“경제 회복 불씨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

“내년 국가 대전환 출발점... 속도감 있게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규제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노동 현안 해결을 각별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며 “최근 울산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라며 “이겨내야 한다.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라”고 했다.

이어 “조금만 신경쓰면 피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반복돼서 참으로 안타깝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안전에 대한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구성을 언급하며 “산업안전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대내외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

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올타리

올타리는 그 만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꾸어갑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어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올타리입니다.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사 시설을 안전 관리는 물론, 공익적 기술 지원으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능력 향상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재해예측시스템' 운영으로 능동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안전관리컨설팅', '안전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깨끗한 농어촌 우수 공공과 생태계 보전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농어촌의 고유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KFC 한국농어촌공사